

헌재로 넘어간 '임성근 탄핵' 임기만료 1달이 '변수'

분격 심리...오는 28일 판사 임기 끝나면 '각하' 가능성 1심, 직권 남용 무죄 선고... '위헌적 행위' 판단에 '관심'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특히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의결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탄핵소추 사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얼마 남지 않은 임 부장판사의 판사 임기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년마다 돌아오는 연임 심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연임을 신청하지 않아 오는 28일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게 된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면 사실상 탄핵 심

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헌재 결정이 임 부장판사 임기 만료 전에 나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임 부장판사의 입장을 듣는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의 심리 시간도 필요한데 28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의 심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선례가 없는 법관 탄핵소추라는 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도 보충·소수의 의견을 통해 임 부장판사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헌재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사건 이첩 요청권 조항인 24조1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보충·소수의 의견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헌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들어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통상 사건 심리 과정에서 헌법의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 여부도 함께 심리한다. 사안에 따라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나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 위헌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 "대북문제, 제재로 해결 안돼...대선 거론 일러"

블룸버그와 인터뷰... "한국의 바이든 별명 자랑스럽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포퓰리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며 "잡지 좋아하는 몰라도 지나고 보면 포퓰리즘 정치와 함께 한 국민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쪽은 포퓰리즘이 문제고, 최근 5~10년 새 지구촌 전체적으로 포퓰리즘이 너무 득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승리해 성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력 등이 비슷하다며 지지자들이 '한국의 바이든'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것에 대해선 "바이든(대통령)은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내

안에서 본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그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 분이 성공하면 제가 성공할 확률도 높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출마할지 안 할지 몰라 아직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 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기본소득제에 대해 정 총리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현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줄 형편이 되면 좋지만 재원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재정을 실행하기 보다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차등지원으로 피해가 큰 쪽에 지원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철학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어렵다"면서 상상력력 강화와 기업의 자발적 기부나 기금 조성 등을 해법으로 들었다.

한편 정 총리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추가 대북 제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제재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훨씬 더 강한 (대북)제재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제재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재 합의와 이행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찾는 박영선·이상호

서울 이태원서 간담회...상권 활성화·운영자금 지원 약속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이상호 예비후보는 4일 이낙연 대표와 함께 이태원을 찾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 후보는 간담회에서 "이렇게라도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며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응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게 되면 1조원 기금을 마련해 2천만원까지 무이

자로 임대료를 대출해드리는 등 추가적 정책을 할 예정"이라며 "집합금지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100% 보상을 못해줘도 일정 부분 해줘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가 반씩 나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불투명한 전망이 가장 답답할 것이고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손님이 올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서울시장이 되면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라며 "응급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지속 가능하게 영입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해보겠다"고 말했다.

다. 우 후보는 "이태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털어내고 옛날처럼 북적거리게 하는 일이 초기에 서울시와 지자체가 손 잡고 할 일"이라며 "방역 상황이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이벤트를 여는 등 이태원부터 '봄업'하는 것을 의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태원 상인들은 골목에서 "더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현실적인 보상만이 살길", "마녀사냥당한 이태원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세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한편 박영선·이상호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 정당 당의 무공천 방침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박 후보는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우 후보는 "공천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가 하는 것"이라고 각각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조오섭, 호남고속철 2단계 자갈→콘크리트 궤도 변경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4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사업이 자갈에서 콘크리트 궤도로 구조변경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호남고속철도 궤도구조변경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이 "고속철도의 궤도 안전성이 높고 생애주기비용 등 경제성을 인정받은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변경을 해야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성과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궤도구조 변경에 따른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결과 고막원~목포 구간 궤도 총사업비가 691억원에서 812억원이 증액된 1503억원으로 승인됐다. 이 구간은 2014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콘크리트 궤도(1845억원)로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2017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 지반조건, 총사업비 등을 이유로 자갈 궤도로 변경돼 사업비가



628억원으로 감액됐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이 2019년 실시한 '콘크리트 궤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적용기준 마련 용역' 보고서에는 콘크리트 궤도가 초기 건설비용이 12억원/km로, 자갈 궤도 8억원/km에 비해 높지만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을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변경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국토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812억원 증액 승인을 이끌어 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동구 대인동, 싹땅

회사 사장상 금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유
- ▶ 지하 1층 공사 중,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공사비 3억, 총 20억

문의. 010-3605-5000